

토론: 금융개혁의 정치경제

2021. 4. 14

경기대학교 경제학부
채희율

주요 발표 내용

1. 금융감독구조 개편

- 금융위 해체
금융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, 정부의 행정처분권 독점의 폐해
- 금감원은 쌍봉형으로 분할
논거?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?

2. 금융산업진흥정책 폐기

- 금융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는 특정 이해관계에 봉사하며,
종종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

3. 재벌체제의 청산

- 재벌체제가 금산분리 등 핵심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는데 걸림돌
- 많은 금융스캔들은 재벌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

발표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

- 규제 완화가 종종 금융사고를 초래
 - 사모펀드 규제완화
 - 저축은행 규제완화
- 금융 왜곡의 원인
 - 여러 주체들의 사적 이익이 작용
- 금융개혁의 주체
 - 집권 초기의 대통령

동의하기 어려운 부분(1)

- 금융위원회 해체 및 “금융산업진흥” 정책의 폐기?
 - 금융위원회 해체의 의미? 금융부문에서 규칙 제정자, 즉 정책담당자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2008년 이전과 같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 체제를 의미?
 -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 (예 기재부로 이관)한다면 “과도”한 금융규제완화는 없어질까?
 -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진흥의 목표에만 경도되어 금융규제를 “과도”하게 완화한 것인가?
 - 금융규제 완화 vs. 강화는 정권의 성격, 시기적 특성, 정책당국의 철학 등과 관련됨. 그것과 감독체계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.
 - 금융감독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은 중요함. 그러나 금융감독이 금융정책과 분리된다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는가?
 - 금융규제와 감독정책이 동일 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. 왜냐하면 금융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시장정보가 금융규제 내지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

동의하기 어려운 부분(2)

- 왜 금산분리에 집착하나? “논점의 왜곡과 뭉개기”와 이슈들은 모두 그리고 규제 완화 중 일부는 금산분리와 관련
 - 금융 -> 산업(금산법 제24조 이슈, 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파동)
 - 산업 -> 금융(은행) (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, 인터넷전문은행법)
 - 양 방향의 금산분리가 지니는 의미는 오늘날 많이 퇴색한 것이 아닌지? 특히 은산분리가 절대로 지켜야 하는 원칙인지는 의문
 - 어떤 제도 내지 정책을 택할지 여부는 그것이 내포하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그것이 지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
 - 금산분리의 적용을 통한 편익이 약해졌다면 금산분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편익보다는 그러한 정책을 고집하는데 따른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.
 - 발표자의 시각에서 ‘뭉개기’나 과도한 ‘규제완화’로 보인 사례가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일 수 있으며, 발표자가 사례로 든 스캔들이 사실은 스캔들이 아닐 수 있음.

동의하기 어려운 부분(3)

- 재벌(삼성, 네이버, 카카오) 개혁이 금융개혁의 요체?
 - 삼성 개혁의 의미는 무엇? 소유 및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? -> 이 이슈는 법률 개정, 경영권 승계, 금산분리 등과 관련된 상당히 복잡하고 현재 진행형인 주제: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음.
 - 네이버, 카카오 등 빅테크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발표에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도 금산분리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됨.
 -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: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행업 진출,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은행업 영위 시도
 - 그러나 이 두 문제 모두 빅테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논거로는 불충분

동의하기 어려운 부분(4)

-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은산분리, 대주주결격사유 등 원칙의 포기라는 비용은 큰 반면 성과는 미미?
 - 발표자 지적대로 중금리 대출 확대 측면에서 아직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
 - 그러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. 신용3법 개정 완료로 향후 이러한 측면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평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
 - 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진출은 기존 은행들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서비스 개선을 촉발하였다고 생각됨.
 -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,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경감
 -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banking이 훨씬 편해진 것은 인터넷은행 진출로 인한 은행 경쟁 촉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됨.

동의하기 어려운 부분(5)

- 전자금융업법 개정으로 빅테크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실상의 은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? 이는 은산분리의 우회에 불과?
 -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의 은행연계계좌가 아닌 자체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급여 이체, 카드대금 납부 등 업무 가능
 - 그렇지만 이러한 계좌의 예탁금은 이자가 지급 되지 않고 별도로 외부에 예치되어 사업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예금과는 다름
 -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소액후불결제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이는 이용자의 재화 및 용역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에 서만 가능하고 사업자가 후불결제 제공의 댓가로 이자수취도 불가하므로 대출과는 다름. 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제공도 금지되므로 카드사의 여신과도 다름.
 - 결국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금중개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름.
 -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급결제에서 빅테크의 활용을 높여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제도를 변경하는 의미가 있음. 이는 소비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편익을 높이게 될 것임. 다만 국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,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공정책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임.
 - 따라서 이러한 제도 도입이 빅테크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시각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는 반면 잠재적인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

마무리-금융개혁에 관한 단상

- 발표자가 지적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한국 금융발전을 위해 경청되어야 함
 - 금융산업진흥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정책은 반성이 필요
 - 금융과 연계된 다양한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 축소 방안 고민 필요
 -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금융에서의 개혁은 경우에 따라 신속·과감한 접근이 필요
- 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
 - 실익이 불분명한 금융감독제도의 개혁이나 금산분리 원칙의 고수가 향후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볼 근거는 강하지 않음.
 - 정책 당국은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도록 금융 관련 주체들을 지배하는 행위 규칙을 섬세하고도 적절하게 변경하고, 관련 주체들이 변화한 규칙에 맞게 행동하는 문화와 관행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감독의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일수도 있음.